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상속 주택, 상속 후 2·3년 동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상속 주택은 상속 후 일정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상속 주택은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의 경우 상속이 개시된 시점(사망일)로부터 2년, 이외 지방지역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지역은 인구 최대 밀집 지역이며, 주택 공급물량이 한정돼 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 데 새로 물건을 대기가 어려운 경우 조금만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도 가격은 빠르게 오른다.

주택은 억 단위의 초고가 상품이고, 선호하는 지역도 뚜렷하다. 자주 사고팔면서 가격 급등을 유인하기가 쉽고, 아파트 단지 내 사람들끼리 일정 이상 가격은 팔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종부세는 부유세 목적도 있으나 주택가격 안정도 추구하는데 부동산 투기를 하기 쉬운 형태, 즉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세금으로 일부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로서 누리던 기본공제나 보유공제 등의 혜택 등을 잃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수도권 다주택자 종과세를 시행했다.

그런데 상속 등으로 의도치 않게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의 경우 기존의 공제 혜택을 잃고, 종과세 적용 등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경우가 있다. 개중에는 지방의 작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도 2주택자가 되어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주택을 한시적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일정 기간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적용은 올해부터이며, 올해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다.

코로나19 피해 국민, 지방세 납기 연장·징수유예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14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을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해주고, 추가로 한번 더 연장신청을 해 최대 1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게 했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지 세목도 고지 예정이거나 이미 고지했다라도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고지해 납세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방세외수입(벌칙금 및 과태료 등)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별법상 근거 조문과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방세 감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감면 때 감면 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리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